

BOK 이슈노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
Tel. 02-759-5223
jaeho.lee@bok.or.kr

2026년 1월 19일

1] 청년세대는 어느 시대나 경제활동 진입기라는 특성상 축적된 자산과 경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타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에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

2] 먼저 현 청년세대 고용여건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거시통계로만 보면 2010년대 초중반 이후 대체로 나아지는 것처럼 평가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고용 경직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들도 경력직을 선호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도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청년층은 소모적인 스펙 경쟁에 매몰되기 쉬우며, 불가피하게 임시·일용직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을 장기적으로 이탈할 우려마저 있다.

▷4페이지 참조

3] 경력 개발의 초기에 있는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이들이 숙련 기회를 상실하여 인적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이후 생애 전체적으로도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상흔효과(scarring effect)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로 낮아지고,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 또는 잃어버린 세대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1페이지 참조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윤용준 거시분석팀장님, 김민식 거시전망부장님, 이지호 조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4]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세대는 과거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경우 학업·취업을 계기로 독립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구 분화에 따른 소형가구 확산과는 달리,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수익성 저하와 팬데믹 이후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로 인해 **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약 거처^{고시원 등} 이용 비중^{10년 5.6% → 23년 11.5%}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14제곱미터 이하} 비중도 지난해 상승 전환^{23년 6.1% → 24년 8.2%}하는 등 주거의 질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8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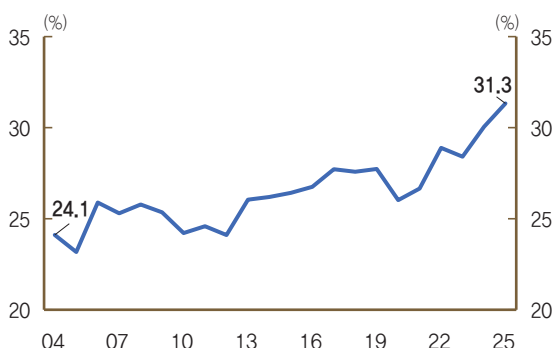
5]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 형성, 인적자본 축적,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지출 비중이 1%p 상승하면 교육비 비중은 0.18%p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부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었다.^{청년층 부채비중(전체연령 대비):12년 23.5% → 24년 49.6%} 이러한 부채 증가는 이들의 **소비 여력을 줄일** 뿐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등 **미래 투자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14페이지 참조

6] 종합해 보면, 오늘날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고용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여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당장은 **청년층의 일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최소한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단기적 금융지원 강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21페이지 참조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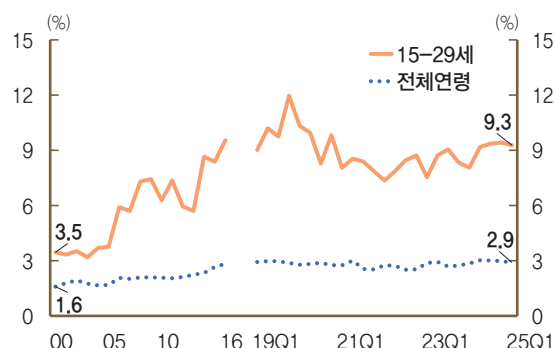
1. 청년세대¹⁾ 15~29세는 특성상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자리, 자산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용과 주거 부문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각 개인의 생애 전반 소득, 순자산, 인적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고용 측면에서 보면 최근 청년층들은 초기 구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이 2004년 24.1%에서 2025년 31.3%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¹⁾ <그림 1> 아울러 주거 측면에서도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보면 200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는 매우 완만히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청년층에서는 2020년경까지 빠르게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²⁾ <그림 2> 그간 가파른 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 취약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첫 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그림 2> 가처분소득 대비 실제주거비 비중



주: 1) 해당 연령대의 (실제주거비 평균/가처분소득 평균)*100

2) 조사 방법 변화 등으로 2017~18년 중 시계열 단절

3) 2016년까지는 연간, 2019년부터는 분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2.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현실을 고용과 주거 여건 측면에서 과거 세대와 비교하여 진단하였다. III장에서는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소득, 순자산, 인적자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실증분석과 해외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1) 한편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졸업시기를 늦추면서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7년 평균 45개월에서 2025년 52개월까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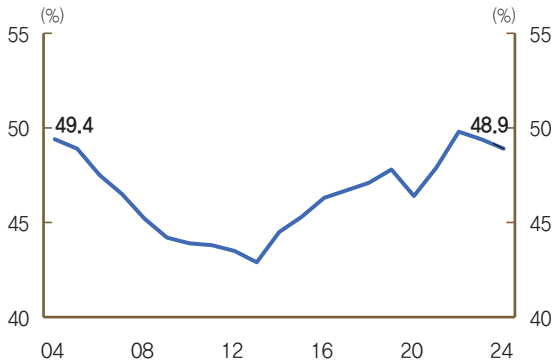
II. 현 청년세대가 마주한 일자리 및 주거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

이 장에서는 현 청년세대의 경제적 현실을 고용과 주거 측면에서 점검하였는데, 특히 첫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A. 높은 첫 일자리 문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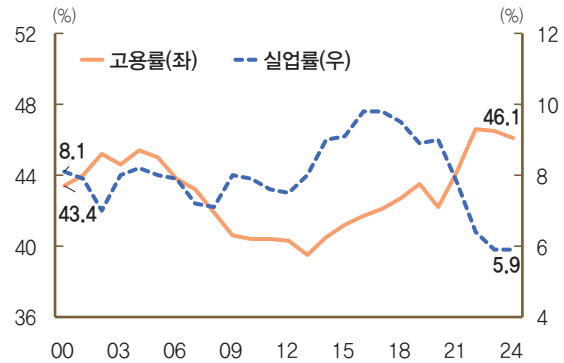
3. 고용률 등 거시통계로 판단할 때,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은 대체로 이전 세대에 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추세가 전환된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으며,¹⁾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대 중반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였다.²⁾

〈그림 3〉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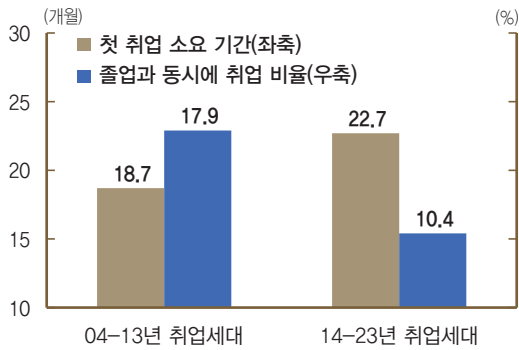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4.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초기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황광훈·박가열(2025)의 청년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04-13년 취업세대는 첫 취업까지 평균 18.7개월 걸렸던 반면 14-23년 취업세대는 22.7개월로 늘어났으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비율도 17.9%에서 10.4%로 하락하였다.³⁾ 이 같은 구직 장기화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쉬었음’ 인구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⁴⁾ 아울러 첫 일자리가 임시직이나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등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도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⁶⁾ 현 청년세대가 직면한 높은 첫 일자리 문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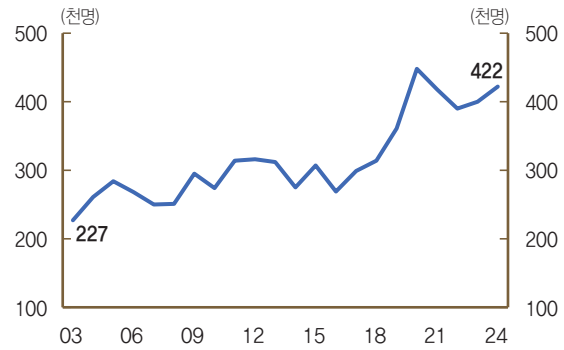
2) 다만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그간의 고용여건 개선 추세가 전환되거나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5〉 첫 취업 소요기간 및 졸업 직후 취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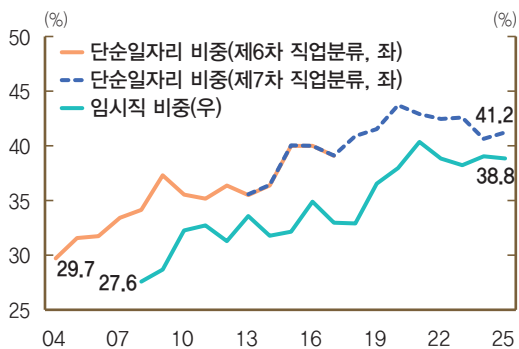
자료: 황광훈·박가열(2025)

〈그림 6〉 청년층 '쉬었음' 인구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첫 일자리 단순직 및 임시직 비중



주: 1) 단순직은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을 포함
 2) 임시직은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시적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표 1〉 첫 일자리 소득 수준

연도	첫 일자리 중위소득(A)	임금근로자 중위소득(B)	비율(A/B, %)
2017	144만원	210만원	68.8
2018	152만원	220만원	68.9
2019	157만원	234만원	67.0
2020	162만원	242만원	66.9
2021	168만원	250만원	67.4
2022	175만원	267만원	65.7
2023	180만원	278만원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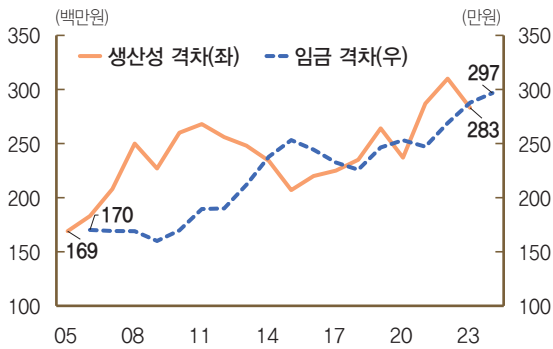
주: 1) 첫 일자리 중위소득은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계산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저자 계산

5. 청년층 초기 구직의 어려움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 성장성 제약, 고용 경직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³⁾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1차 노동시장(대기업)과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그림 8〉}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움에 따라,^{〈그림 9〉} 청년층은 2차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기보다 처음부터 1차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장기간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경향을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1차(Primary)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의 근로자로 구성되지만, 2차(Secundary)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임금의 근로자로 구성된다. 윤윤규·조성훈(2018)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1차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졸업 후 취업 준비나 일자리 탐색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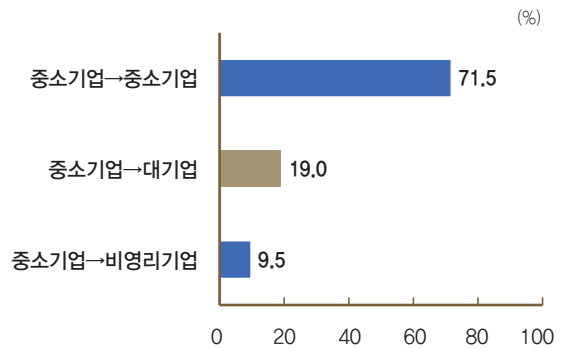
보이고 있다. 이태·안준홍(2023)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및 임금 격차



주: 1) 제조업 생산성 = 실질부가가치(백만원) / 노동투입(명)
 2) 임금은 월임금총액 기준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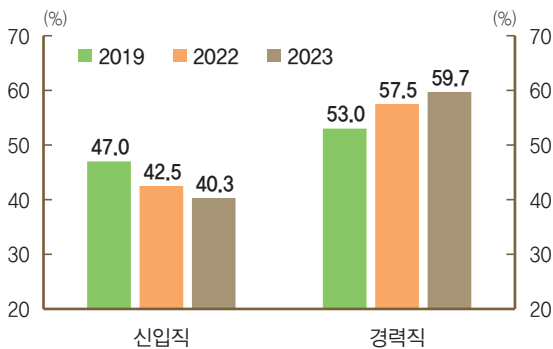
〈그림 9〉 청년층 일자리 상향 이동 확률



주: 1) 2023년 기준
 2) 중소기업 진입 후 3년 내 이동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일자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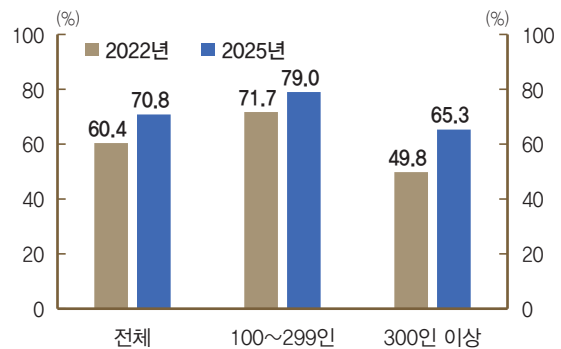
6.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가 청년층의 초기 구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력직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림 10〉 이에 적합한 수시채용 방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림 11〉 채민석·장수정(2025)은 이러한 경력직 채용 확대가 비경력직자의 상용직 취업확률을 경력직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대와 30대 간 상용직 고용률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10〉 경력직 채용 비중



주: 1)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500인 이상 기업 100개를 기준으로 조사
 자료: 이상준 외(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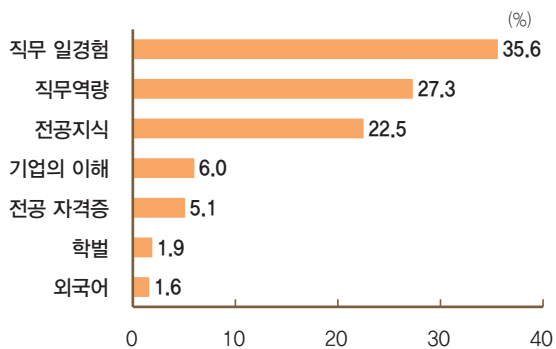
〈그림 11〉 수시 채용 비중



자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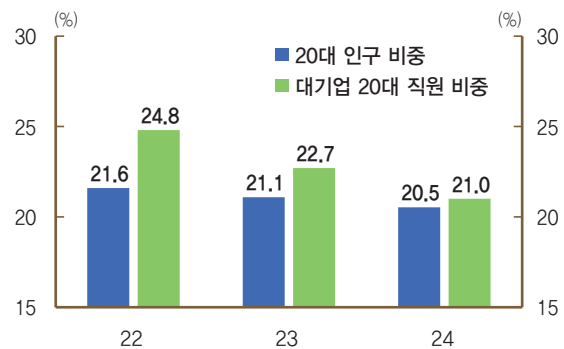
7. 실제로 기업들은 신규채용 시 직무 관련 일경험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취업 이
전부터 일정 수준의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채용 관행변화는 노동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의 청년층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층이 양
질의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하반기 고용
노동부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정 요인으로 ‘직무 일경험’(35.6%)과 ‘직무역
량’(27.3%)을 꼽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그림 12> 최근 대기업 내 20대 근로자 비중이 20대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림 13> 20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신규채용 결정 요소



주: 1)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기업채용동향조사 결과

<그림 13> 대기업 20대 직원 비중



주: 1)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67곳을 대상으로 2022~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

2) 20대 인구비중 = 20~29세 인구수/20~59세 인구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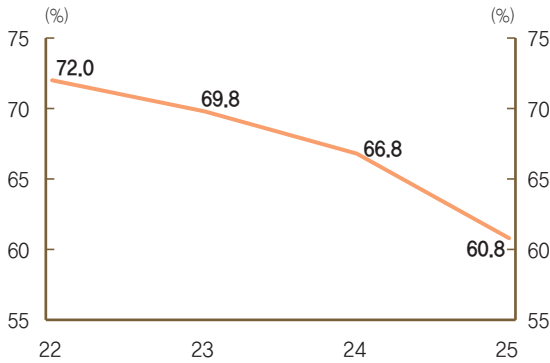
자료: 기업데이터연구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8.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앞으로 청년층 인력이 주로 수행하던 업무들이 구조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⁴⁾ 한진수·오삼일(2025)은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Brynjolfsson et
al.(2025)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미국 전체 고용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
년층 고용은 오히려 제약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직군에서 청년 고
용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4) Brynjolfsson et al.(2025)은 시가 암기 기반의 지식(codified knowledge)은 잘 대체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대체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근로자나 시가 보완 역할을 하는 직종에서는 AI의 부정적 영향이 덜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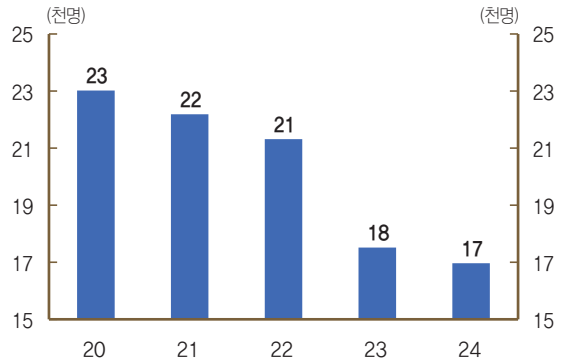
9. 지금까지의 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규모가 축소된 것도 청년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채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그림 14> 공공부문은 2023~24년 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5> 현 청년세대는 과거 세대와 달리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경기가 활발하던 시기처럼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구직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신규채용 계획 '있음' 응답 비중



주: 1)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그림 15>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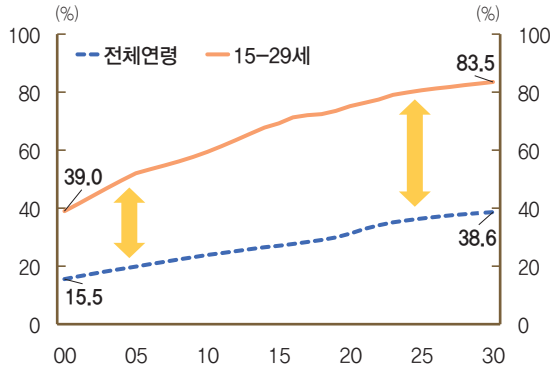


주: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신규채용 중 청년 항목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B. 높은 주거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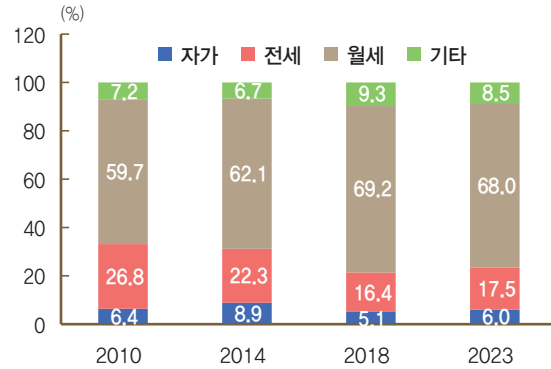
10. 청년층 주거의 주요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대체로 소형면적 비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1인 가구 비중은 진학·취업, 독립 선호, 만혼·비혼 등의 이유로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국가데이터처 전망에 따르면 동 비중이 2030년경에는 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연령 기준 거주주택 면적(전용면적의 중앙값)은 2023년 66.1m²이었던 반면 29세 이하 1인 가구는 26.4m²로 전체연령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의 대부분은 월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전세사기, 전세의 월세화 등의 이유로 월세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70% 가까이 이르고 있다. <그림 17>

〈그림 16〉 1인 가구 비중



주: 1) 2022년 추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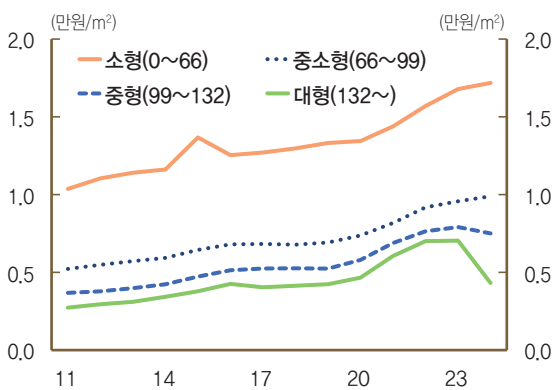
〈그림 17〉 청년층 주택 점유형태



주: 1) 기타는 사글세, 연세, 일세, 무상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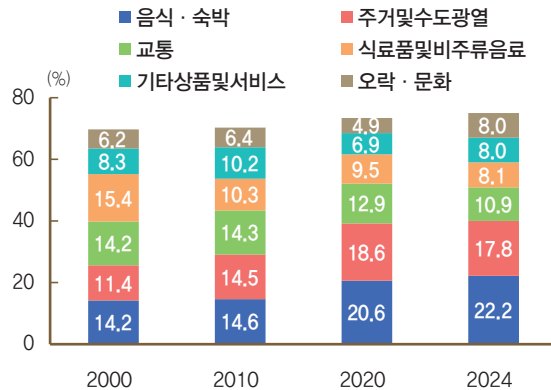
11.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으로 월세가 급등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다.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 분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낮은 수익성과 팬데믹 이후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면서 월세 비용 상승 압력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8〉}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청년층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24년 17.8%로 크게 늘어나 음식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9〉} 청년세대의 주택 임차료 과부담 가구 ^{주거비/소득 > 30%}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정도로 그 비중이 전체연령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0〉} 이같이 주거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 ^{이른바 '지옥고'}에서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표 2〉}

〈그림 18〉 비아파트 규모별 월세 실거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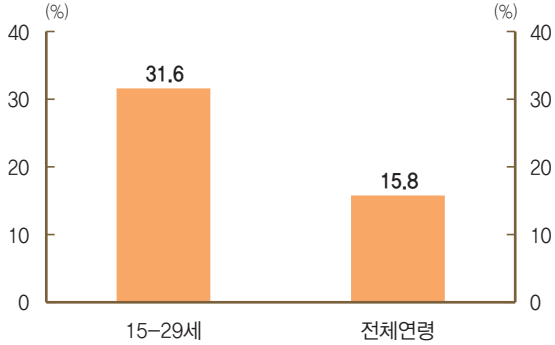
주: 1) 단위면적당 월세 기준
 2) 비아파트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그림 19〉 청년층 품목별 소비 비중



주: 1) 2024년 상위 6개 품목 기준
 2) 품목별 지출액 평균 / 총소비 지출액 평균*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그림 20〉 주택 임차료 과부담 가구 비중



주: 1) 주택 임차료 과부담 가구는 월소득 대비 월세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
 2) 2023년 조사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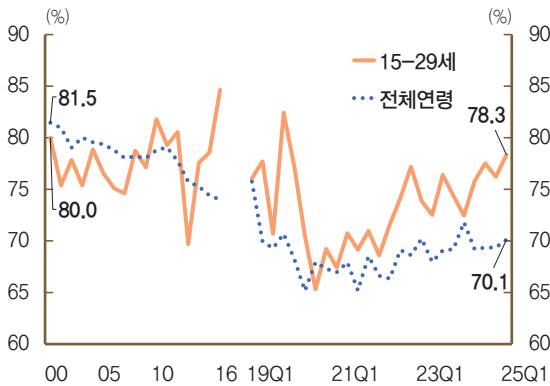
〈표 2〉 청년층 주택유형

	2010	2014	2018	2023
다가구단독주택	44.3	45.6	53.6	41.4
아파트	21.3	25.3	13.3	18.7
오피스텔	9.5	9.3	12.6	14.5
다세대주택	8.4	11.1	9.5	11.1
연립주택	2.5	2.2	0.7	1.9
일반단독주택	8.3	3.5	1.5	1.0
기타(고시원 등)	5.6	3.0	8.8	11.5

주: 1) 기타는 고시원, 영업겸용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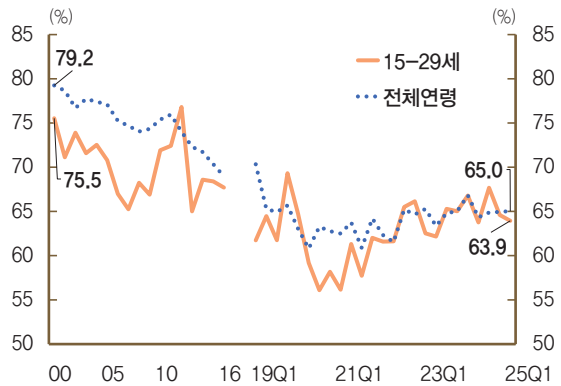
12.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층의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팬데믹 이후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기에는 주거비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에 생활비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청년층의 소비성향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야 하나, 주거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체연령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그림 22〉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청년층은 음식·숙박, 식료품, 의류 등 필수재 성격의 의식주 지출 비중이 높아, 〈그림 23〉 팬데믹 이후 이들 품목의 가격 상승이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그림 21〉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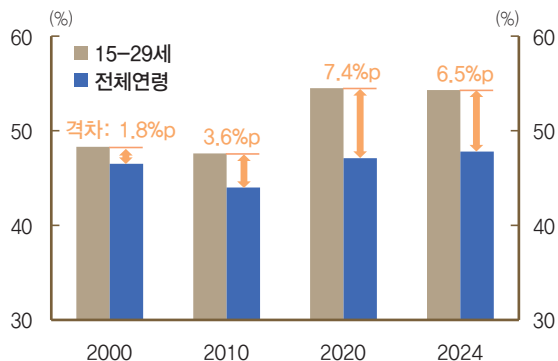
주: 1) 조사방법 변화 등으로 2017~18년 중 시계열 단절
 2) 평균소비성향은 각 연도별로 개별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구한 후 전체가구의 중앙값을 계산하여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그림 22〉 평균소비성향(실제주거비 제외)



3) 2016년까지는 연간, 2019년부터는 분기 기준
 4) 실제주거비 제외 평균소비성향은 전체소비지출에서 실제주거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소비성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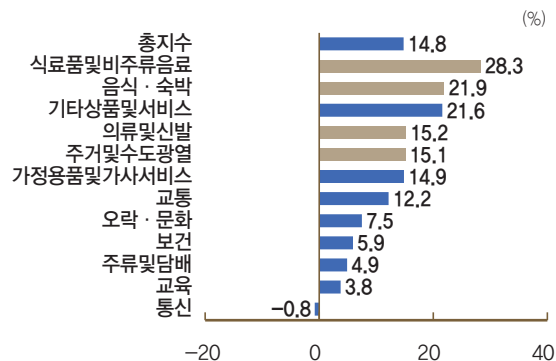
〈그림 23〉 의식주 지출 비중



주: 1) 주거 및 수도 광열, 음식·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을 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그림 24〉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



주: 1) 2019년 대비 2024년 물가상승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조사

III. 청년세대 경제적 현실의 생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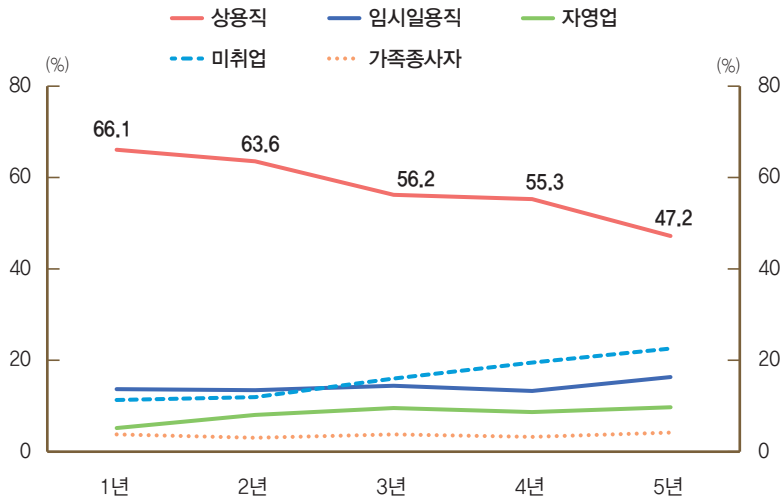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장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애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A. 초기 구직 장벽의 경제적 영향

13. 청년세대가 겪는 초기 구직 장벽은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14. 경력 개발 초기에 있는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생애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로 데이터분석에서도 나타나는데, 1~2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이면 47.2%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그림 25〉 청년층 미취업 기간별 5년 후 종사상 지위 확률



주: 1)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을 계산하고 마지막 미취업 5년 후 종사상 지위의 확률을 계산
 자료: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15. 청년층의 초기 구직 장기화는 숙련 형성의 기회를 제약하여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는 경우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동 분석에서는 임금에 미치는 여타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나이, 교육연수, 상용직 더미, 기혼 더미 등을 활용하였는데, 모형 및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log(wage)_{i,t} = \alpha + \beta_1 unempduration_{i,t} + \beta_2 age_{i,t} + \beta_3 education_{i,t} + \beta_4 jobtype_{i,t} + \beta_5 marital_{i,t} + \Gamma location_{i,t} + \psi_i + v_t + e_{i,t} \quad (1)$$

식 (1)에서 개인별 i 에 대해 $wage$ 는 실질임금을, $unempduration$ 은 과거 미취업 기간을, age 는 나이를, $education$ 은 교육연수를, $jobtype$ 은 상용직더미_{상용직 1, 비상용직 0}를, $marital$ 은 기혼더미_{기혼 1, 미혼 0}를, $location$ 은 거주지역별 더미_{19개 시도더미}를, ψ_i 와 v_t 는 각각 개인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e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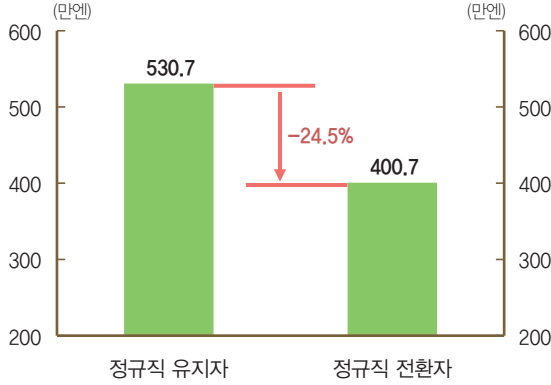
〈표 3〉 식 (1) 추정 결과

변수	계수	p값
미취업기간	-0.067	0.000
나이	0.027	0.000
교육연수	0.045	0.000
상용직더미	0.326	0.000
기혼더미	0.139	0.000
거주지역더미	YES	
Within R-squared	0.2362	
Obs.	117,511	

16.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혹은 잃어버린 세대}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고실업 시기를 겪은 후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세대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에 학교를 졸업한 세대로,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근태·이지선(2017)에 따르면 동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당시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1991년 81.3%에서 2003년 55% 수준까지 급락했고, 15~24세 비정규직 비중은 1990년 20.5%에서 2005년 47.7%까지 상승하였다.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4)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35~44세 일본 남성의 평균 연봉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속자의 평균보다 2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²⁶⁾ 또한 정성춘·권혁욱(2019)은 2012~17년 동안 전체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한 반면, 취업 빙하기 세대로 볼 수 있는 40~49세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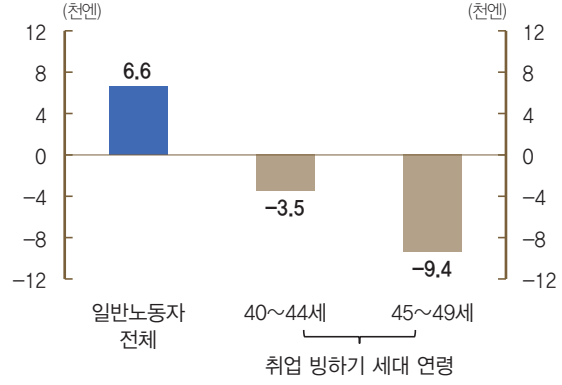
5) 노동시장에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Bruhn et al.(2025)은 초기 직업 경험이 장기적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경로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26〉 정규직 유형별 평균 연봉



주: 1) 정규직 전환자는 비정규직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를 의미
 자료: 일본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4)

〈그림 27〉 취업 빙하기 세대 임금 변화



주: 1) 2012년 대비 2017년 임금 증감액 기준
 자료: 정성춘·권혁욱(2019)

B. 높은 주거비 부담의 경제적 영향

17. 청년세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 및 인적자본 축적을 제약하고, 나이가 과도한 부채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직 지연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상승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더욱 축소시킨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계층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동패널 1~25차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가계의 총자산_{금융·실물자산 포함}은 평균적으로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동 분석에서는 주거비 이외에도 금융부채, 소득, 기대수명, 경제정책 불확실성, 가구원수, 나이, 나이제곱 항이 통제변수로 활용되는데, 모형 및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totalasset)_{h,t} = & \alpha + \beta_1 \ln(jugeo)_{h,t} + \beta_2 \ln(finliabil)_{h,t} + \beta_3 \ln(income)_{h,t} + \beta_4 lifexp_t \\ & + \beta_5 epu_t + \beta_6 numoffam_{h,t} + \beta_7 age_{h,t} + \beta_8 age^2_{h,t} + \psi_h + v_t + e_{h,t} \end{aligned} \quad (2)$$

식 (2)에서 가구 h 에 대해 $totalasset$ 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더한 총자산을, $jugeo$ 는 주거비 지출을, $finliabil$ 은 금융부채를, $income$ 은 소득을, $lifexp$ 는 기대수명을, epu 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numoffam$ 은 가구원수를, age 와 age^2 은 가구주 나이와 나이제곱을, ψ_h 와 v_t 는

각각 가구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e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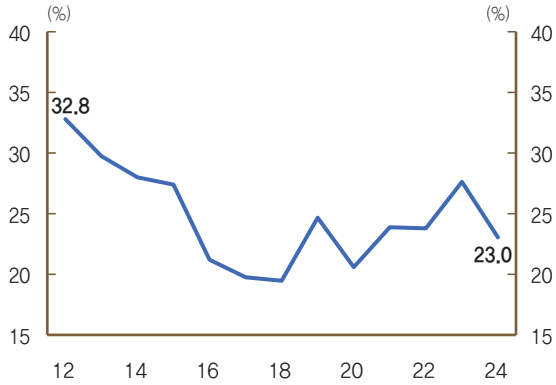
〈표 4〉 식 (2) 추정 결과

변수	계수	p값
주거비	-0.043	0.011
금융부채	0.252	0.000
소득	0.145	0.000
기대수명	0.122	0.068
경제정책 불확실성	0.002	0.192
가구원수	0.085	0.000
나이	0.047	0.178
나이제곱	-0.0005	0.000
Within R-squared	0.1879	
Obs.	22,026	

19. 실제로 청년층의 자산 축적 속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전체 연령대 자산_{금융+실물} 대비 29세 이하 청년층 자산 비율은 2010년대 초반 30%대 초반에서 2024년에는 2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28〉 이렇게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9〉 아울러 청년층-고령층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림 30〉 이로 인한 부의 효과 저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 미흡 등으로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예상된다. 세대 간 격차에 더해 청년 내부의 자산 불평등 심화 현상도 관측되고 있으며, 〈그림 31〉 이는 사회 이동성을 낮추고 불평등의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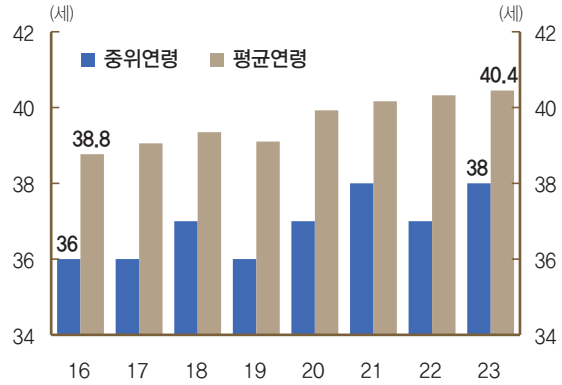
6) 기대수명은 국가데이터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www.policyuncertainty.com이 출처이다.

〈그림 28〉 청년층 자산 수준 전체인령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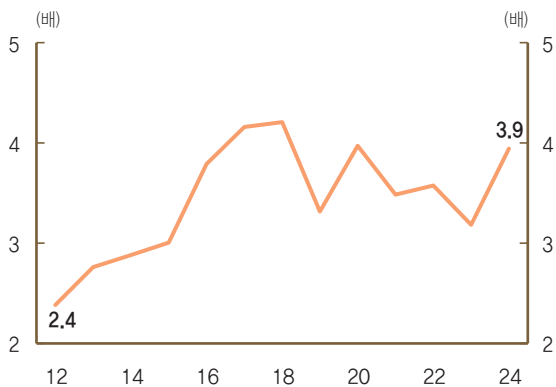
주: 1) 29세 이하 자산 증감값 / 전체인령 자산 증감값 * 1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29〉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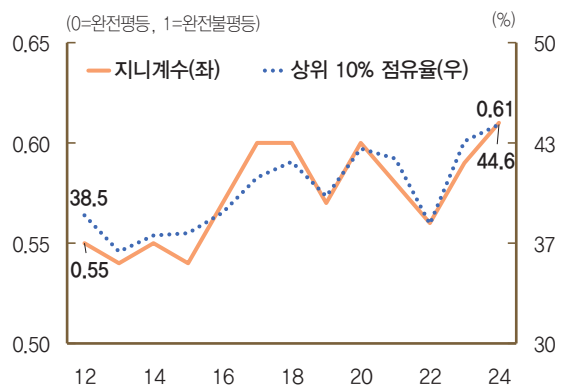
주: 1)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했을 때의 나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그림 30〉 고령층-청년층 자산 격차



주: 1) 60세 이상 자산 증감값 / 29세 이하 자산 증감값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1〉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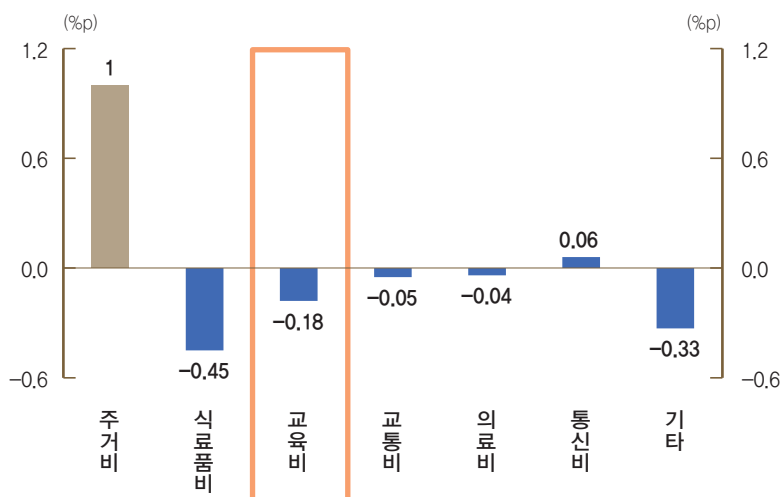
20. 주거비 급증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청년세대의 인적자본 형성이 제약될 가능성

이 크다. 2017~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통합 최소지승법^{Pooled OLS}으로 분석한 결과, 총소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이 1%p 증가할 때 식료품비가 0.45%p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교육비가 0.18%p 감소하였다. ^{〈그림 32〉} 이처럼 교육비가 감소하게 되면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주거비 지출 비중 1%p 상승으로 교통비가 0.05%p, 의료비가 0.04%p 각각 감소하였으나, 통신비의 경우 디지털 소비 대체 등의 이유로 0.0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동 품목들은 식료품비나 교육비와 비교해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모형 및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itemshare_{h,t} = & \alpha + \beta_1 jugeotshare_{h,t} + \beta_2 \ln(finasset)_{h,t} + \beta_3 \ln(realasset)_{h,t} \\
 & + \beta_4 \ln(finliabil)_{h,t} + \beta_5 \ln(dispincome)_{h,t} + \beta_6 age_{h,t} + \beta_7 sex_{h,t} \\
 & + \psi education_{h,t} + \Omega year_t + e_{h,t}
 \end{aligned} \tag{3}$$

식 (3)에서 가구 h 에 대해 $itemshare$ 는 교육비 등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jugeotshare$ 는 주거비지출 비중을, $finasset$ 은 금융자산을, $realasset$ 은 실물자산을, $finliabil$ 은 금융부채를, $dispincome$ 은 가처분소득을, age 는 가구주 나이를, sex 는 가구주 성별더미(남성 1, 여성 0)를, $education$ 은 가구주 교육수준별 더미를, $year$ 은 연도별 더미를, e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은 15-39세이고, 비자가 거주이며, 자녀 보육료 포함 문제를 해결하고자 1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그림 32〉 주거비 지출 비중 1%p 상승 시 품목별 소비지출 조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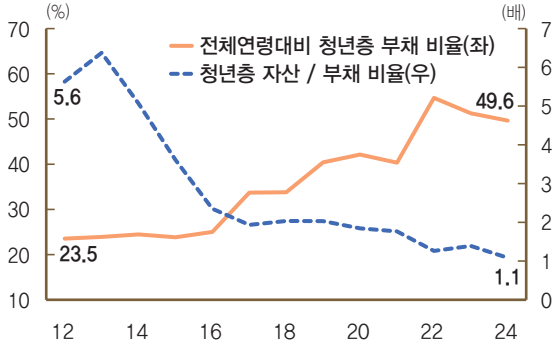


자료: 식 (3)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1. 청년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부채 보유 규모를 크게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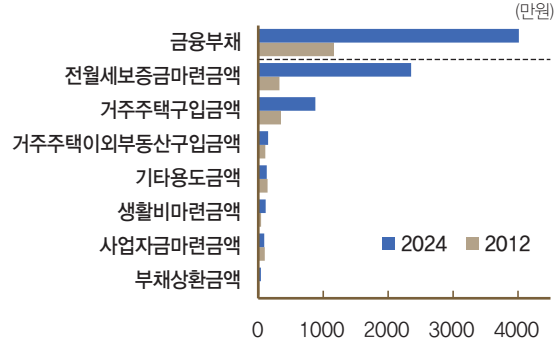
2010년대 초반 이후 청년층의 부채 증가 속도는 전체 연령대보다 훨씬 빨랐으며,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2012년 5.6배에서 2024년 1.1배까지 하락하는 등 청년세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다. 〈그림 33〉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 이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그림 34〉 이는 주거비 부담 증가가 청년층의 부채가 급증한 핵심적인 원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소득 대비 금융부채 수준을 보더라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청년층에서는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그림 35〉 소득 대비 이자상환 비율 또한 전체연령에서는 감소한 것과 달리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36〉

〈그림 33〉 청년층 부채 수준^{전체연령 대비} 및 자산/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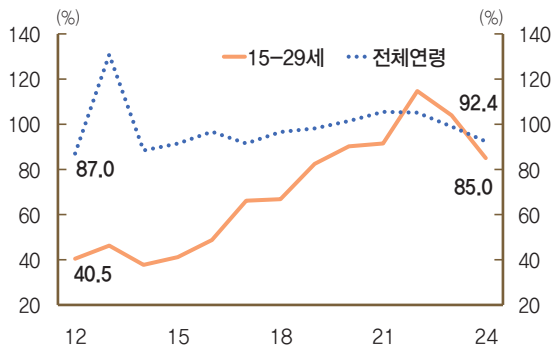
주: 1) 29세 이하 부채 평균값 / 전체연령 부채 평균값 * 100
 2) 29세 이하 자산 증양값 / 29세 이하 부채 증양값 * 1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4〉 청년층 대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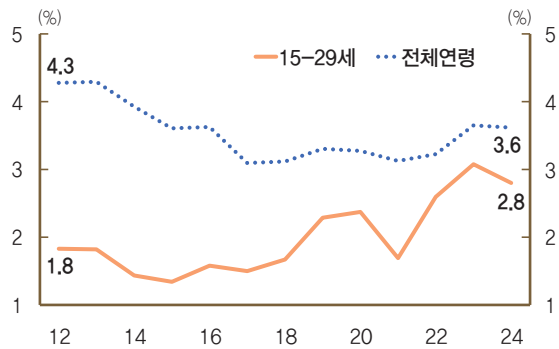
주: 1) 29세 이하 각 항목 평균값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5〉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주: 1) 금융부채 평균값 / 경상소득 평균값 * 1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6〉 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율



주: 1) 이자지급 평균값 / 경상소득 평균값 * 1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2. 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이자지급 증가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미룰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축시켜 교육·훈련·건강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해 보면, 가처분소득이 1% 줄어들 때 총소비지출은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동 분석에서는 가처분소득 이외에도 자산, 부채, 나이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가 활용되었는데, 모형 및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text{consumption})_{h,t} = & \alpha + \beta_1 \ln(\text{finasset})_{h,t} + \beta_2 \ln(\text{realasset})_{h,t} + \beta_3 \ln(\text{finliabil})_{h,t} \\
 & + \beta_4 \ln(\text{dispincome})_{h,t} + \beta_6 \text{age}_{h,t} + \beta_7 \text{sex}_{h,t} \\
 & + \psi \text{education}_{h,t} + \Omega \text{year}_t + e_{h,t}
 \end{aligned}
 \tag{4}$$

식 (4)에서 가구 h 에 대해 $consumption$ 은 총소비지출을, $finasset$ 은 금융자산을, $realasset$ 은 실물자산을, $finliabil$ 은 금융부채를, $dispincome$ 은 가처분소득을, age 는 가구주 나이를, sex 는 가구주 성별더미^{남성 1, 여성 0}를, $education$ 은 가구주 교육수준별 더미를, $year$ 은 연도별 더미를, e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분석대상은 식 (3)의 추정과 같이 15-39세이고, 비자가로 거주하며, 가구원수가 1명인 1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표 5〉 식 (4) 추정 결과

변수	계수	p값
가처분소득	0.179	0.005
금융자산	0.019	0.687
실물자산	-0.018	0.471
금융부채	0.060	0.058
나이	0.005	0.563
성별	0.042	0.590
교육수준별 더미		YES
연도별 더미		YES
R-squared		0.3776
Obs.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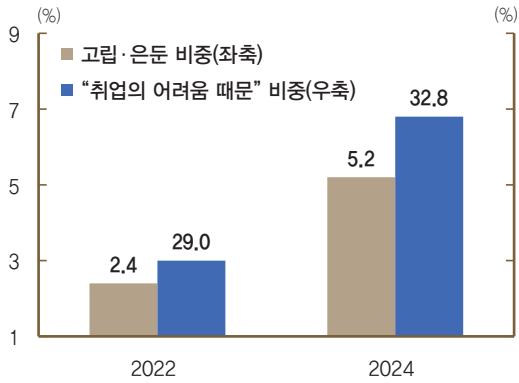
C. 고용 및 주거불안의 사회문화적 영향

23. 청년세대의 고용과 주거 불안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기반의 부재는 결혼·출산·사회적 참여를 지연시키고, 공동체로부터의 단절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을 확산시켜 사회문화적 활력을 약화시킨다. 우리나라 청년층 중 고립·은둔 비중은 2022~24년 중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7> 주요 선행 연구를 보면 이철희(2023)는 일자리 질이 출산율과 혼인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했으며, Matsuda et al.(2024)은 한국과 일본 데이터를 이용해 고용 불안정이 결혼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으로 세대 간 경제적 의존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부모 부양 부담이 증가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근테·이지선(2017)은 일본의 중년층^{35~59세} NEET⁷⁾ 규모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15~34세} NEET는 같은 기간 감소한 점을 근거로, <그림 38> 취업 빙하기 세대로

7)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즉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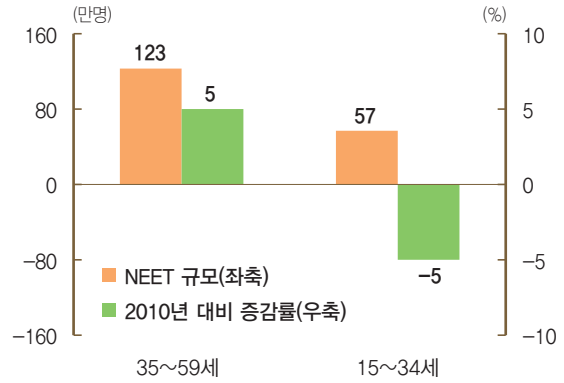
인해 일본 내 NEET 문제가 청년에서 중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8050 문제'는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에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지내며 부모의 부양에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부모가 노령화되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사망 시에는 소득·주거 지원이 동시에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사례는 사회진입 초기의 문제가 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7〉 우리나라 청년층 고립·은둔 비중



주: 1) 고립·은둔 청년은 "취미만을 위해 외출",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 "방에서만 나옴", "방도 거의 안 나옴"으로 응답한 19-34세 청년이며, 임신·출산·장애 등은 제외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그림 38〉 일본 연령별 NEET 규모 및 증감률



주: 1) 2016년 기준
 자료: 이근태·이지선(2017)

IV.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24. **현 청년세대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은 단순한 세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리스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첫 일자리 진입장벽에, 주택시장에서는 불안정한 거주환경과 과중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어 소득이 감소하고 자산 형성이 늦어지는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제약은 인적자본 축적을 지연시키고 소비 여력을 약화시켜 생산성과 총수요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25.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 청년세대와 관련해서는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판단되는데, 금융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도 필요하겠으나, 노동·주택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6. 청년세대의 초기 구직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더해 **②일경험 지원 확대, ③교육과 직업 연계, ④창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고용 경직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7. **우선 기업의 성장 사다리^{영세-중소-중견-대기업}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 보호보다는 성장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전환⁸⁾이 필요하며, 기업의 성장을 단념하게 만드는 계단식 규제⁹⁾를 철폐하는 노력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년세대가 경력을 쌓아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8) 한국은행 경제전망(25.11월호) 심층연구(장근호 외,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데, 동 보고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을 '업력 7년 이하 기업 지원'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9) 대한상공회의소(2025.11.24일자 보도자료)는 기업 규모별로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며, 이같이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규제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¹⁰⁾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핵심 과제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¹¹⁾

(일경험 지원)

28. 청년층이 관심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초기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¹²⁾ 구체적으로 청년과 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지방으로 확산해 지역 간 기회 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우 경력 초기에는 일경험뿐만 아니라 본인의 스킬과 역량을 키우려는 욕구도 큰 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형, 공모형 등 성취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참여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다소 짧은 기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일경험 기간을 직무에 맞춰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두고, 단순 인턴십 수준을 넘어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과 직업 연계)

29. 교육과 직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교육-직업 연계 이원화 제도(dual system)가 정착된 대표적인 국가로, 학습이 기업 현장과 직업학교에서 병행되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주 3~4일은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주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이동임(2019)은 이러한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인력채용 비용을 절감시키며,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취업을 가능케 하며, 재정적 안정을 바탕으로 인적자본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 간 산학협력 확대, 대학 내 직무연계형 인턴십 강화,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직업교육과정 공동개발 등을 통해

10)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2025.6)』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 등
 11) 이호연·양재진(2017) 역시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2) 정란 외(202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참조

단계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층이 졸업 이전부터 현장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 활성화)

30. 창업은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통적 고용경로가 한계에 부딪히고, 대기업 중심의 채용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창업은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 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다. 창업을 통해 청년층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산업·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 지원과 재도전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B.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31.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①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②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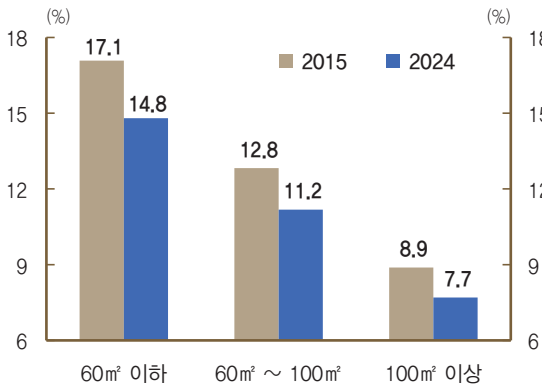
(소형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32. 청년층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 수요가 집중되는 소형 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수도권에서 청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형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팬데믹 이후 사업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 확대로 비아파트 주택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면적 비아파트의 감소 폭이 더욱 컸다. ^(그림 39) 공공임대 역시 높은 경쟁률이 지속되는 등 수요가 매우 견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 친화형 신규 주택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일)”에서 노후 공공청사, 철도역, 대학 유희부지,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해 청년 주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만큼, 해당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제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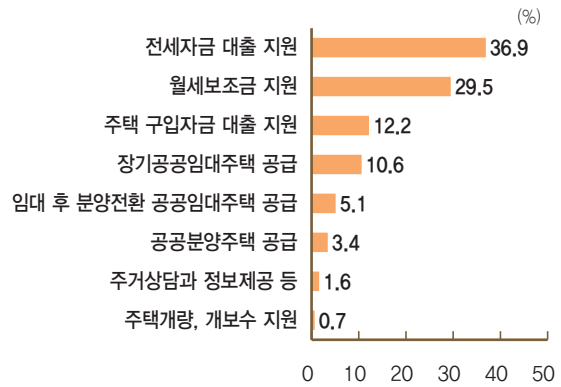
33.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구입 자금과 관련된 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금 확대, 우대금리 적용, 보증료 할인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청년층 다수가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직접적 금융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그림 40>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이거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 효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림 39> 비아파트 주택 면적별 비중



주: 1) 총주택 대비 비중
 2) 비아파트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
 3) 연면적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그림 40> 청년층 선호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 1) 2023년 조사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참고문헌〉

- 안준기 · 오세미,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한국고용정보원 계간 고용이슈 2025년 봄호, pp. 6~26.
- 윤윤규 · 조성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7, pp. 33~71.
- 이근태 · 이지선, “우리나라 잃어버린 세대 등장의 의미,” LG경제연구원, 2017.
- 이동임, “Industry 4.0에 대응한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최근 변화,” THE HRD REVIEW 22권 3호, 2019.
- 이상준 · 노세리 · 오진욱 · 박지성 · 노성철,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5.
- 이철희, “일자리 질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지역 제조업 고용 비율의 효과,” 『한국경제연구』, 제41권 제2호, 2023, pp. 5~34.
- 이태 · 안준홍, “한국의 분절된 노동시장과 노동이동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46권 제4호, 2023, pp. 41~84.
- 이호연 · 양재진, “퍼지셋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안정 노동자,”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4호, 2017, pp. 65~103.
- 장근호 · 최기산 · 서재용 · 이형석 · 김진영 · 김용수,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은행 경제전망 제2025년 11월호, pp. 79~113.
- 정란 · 김봄이 · 손규태 · 박동찬 · 이영민 · 문유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수탁연구 2023-07.
- 정성춘 · 권혁욱,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9-01, 2019.
- 채민석 · 장수정,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고용,” BOK 이슈노트 제2025-1호.
- 한진수 · 오삼일,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황광훈 · 박가열,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Vol. 8, 2025, pp. 2~14.

Bloomberg, “Japan's Shut-Ins, Hikikomori,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Have No Jobs,” 2020.10.2일.

Bruhn, Jesse, Jacob Fabian, Luke Gallagher, Matthew Gudgeon, Adam Isen and Aaron R. Phipps, “Long-run Effects of Early Career Occupational Experience,” NBER working paper 34463, 2025.

Brynjolfsson, Erik, Bharat Chandar and Ruyu Chen,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Digital Economy Lab, 2025.

Matsuda, Shigeki, Takayuki Sasaki, Jaeyoul Shin and Jihey Bae, “Deterioration in youth employment, social contexts, and marriage decline in Japan and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20, No. 2, 2024, pp. 203~22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就職氷河期世代のキャリアと意識 —困難を抱える 20 人のインタビュー調査から—,” JILPT 資料シリーズ No. 272, 2024.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6-2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